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뜻하며,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 ②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외관적 위험의 경우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이다.

[정답] ②

[해설]

- ② 틀림.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는 위험혐의에 대한 설명이다.

①③④ 옳음.

▣ 위험의 분류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른 구분)(정진천 실무종합:p.8)

외관적위험	① 경찰이 사례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이 경우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손실 보상은 인정 될 수 있다. 예 순찰중인 경찰관이 실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그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TV실인극을 시청하고 있는 경우
위험혐의	①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거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② 경찰의 개입은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위험조사 차원에서의 개입과 같은 예비적인 조치에만 국한 되어야 한다. 예 방송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보
오상위험 (추정적위험)	① 경찰이 객관적으로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이 경우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 할 수 있다. 예 영화 촬영 중에 격투신 장면을 보고 실제 상황으로 오인한 경찰관의 개입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포함되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나,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①)
- ② 틀림. (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 ③ 옳음. (동법 제8조①)
- ④ 옳음 (동법 제5조①, ② 제7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진천 실무종합:p.25)

정의 (제2조)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7조)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일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8조)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3.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제강점기 경찰은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의 명령권 등을 통해 전체 주의적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 ② 미군정하에서 경찰제도·인력 등 식민 경찰체제 청산은 전체적으로 미흡했으나,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보안법은 폐지되었다.
- ③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대륙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 ④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이다.

[정답] ③

[해설]

- ③ 틀림.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 ①②④ 옳음.

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그 불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1/3을 감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 ㉣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 틀림.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③)
- ㉡ 옳음. (동법 제14조 ⑥)
- ㉢ 틀림. (동법 제13조①②)

소청인의 진술권 (제13조)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 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u>무효</u> 로 한다.
-----------------------	--

- ㉣ 옳음. (동법 제14조 ⑦)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5.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무기휴대권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권의 법적근거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는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거짓보고 등의 금지의무 등이 있다.
- ④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 다른 의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2조)
- ② 틀림. 무기휴대권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제20조 ②)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권의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 ③ 틀림. 거짓보고 등의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상의 직무상의무이다.
- ④ 틀림. 성실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로서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 다른 의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실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②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88누3161) ➡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인무로서 <u>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적의무</u> 이며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	---

▣ 경찰공무원의 의무 개관

의무	국가 공무원법	선서의무(제55조), 성실의무(제56조)	일반의무
		<u>정치운동 금지 의무</u> (제65조) <u>비밀엄수 의무</u> (제60조) <u>품위유지 의무</u> (제63조) <u>청렴의무</u> (제61조) 영예 등의 제한(제62조) <u>집단행위 금지의무</u> (제66조)	신분상 의무
		법령준수의무(제56조),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무전념 의무(제58조, 제64조)★ <u>직장이탈금지</u> (제58조) <u>영리업무종사금지</u> (제64조) <u>검직금지</u> (제64조)	직무상 의무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경찰 공무원법	제복착용의무(제20조1항),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 의무(제18조 제1항), 지휘권남용금지 의무(제19조), ☆ 직무유기금지 의무(제19조)★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근(음)무시간 중 음주금지(제9조)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제10조)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제8조)☆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공개의무(제3조, 제10조)	신분상 의무

6.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 ③ 경찰권 발동이 경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것은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 ④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적 근거에 의해 발동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틀림.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실정법적 근거에 의해 발동해야 한다. 경찰긴급권에 대한 일반법은 부재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① 제3호, 소방기본법 제24조① 등의 개별법이 경찰긴급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①②③ 옳음.

7. 다음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즉시강제가 단시간에 종료되는 성질상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적합하지 않다.
- ②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은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
- ④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유사하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답] ②

[해설]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 ② 틀림.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 하고 있다. 위험을 감지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만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서진 문 값을 사비로 변상하던 폐단을 막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최근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 (제11조의2)	① 국가는 경찰관의 <u>적법한 직무집행</u>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u>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u>을 입은 경우
------------------	---

①③④ 옳음

■ 경찰강제(정진천 실무종합:p.80)

경찰강제	경찰상 강제집행 수단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고 발생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절차: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예)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집행벌 (이행강제금)	① <u>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u>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u>간접적으로</u>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벌 ➡ 장래에 향한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② 경찰벌과 병과 할 수 있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부과도 가능 ➡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 안 됨. 예)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①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u>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u>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②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 절차: 독촉 - 체납처분(압류 - 매각 - 청산) 예) 조세의 강제징수
		직접강제	경찰상 의무위반에 대해 최후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예)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불법영업소의 폐쇄조치,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조치
	경찰상 즉시강제	① <u>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u> 즉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② 즉시강제는 발동에 있어 엄격한 법규의 근거를 요한다. ③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 ④ <u>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u>되지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절충설, 多) ⑤ <u>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다.</u> 예)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처리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휴대하고 있는 흉기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에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 ㉢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가족, 친지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음식점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 음식점이 영업시간이라면 음식점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① 제2호)

㉡ 틀림. 흉기조사의 대상은 불심검문 대상자이고 임시영치의 대상은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이다.(동법 제3조③, 제4조③)

■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 (제3조)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보호조치 등 (제4조)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틀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⑦)

㉣ 옳음.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 등)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④)

㉤ 옳음. 흥행장(興行場),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그에 준하는 관계인은 경찰관이 범죄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의 영업시간이나 해당 장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시간에 그 장소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동법 제7조②)

㉥ 틀림.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제8조①)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9.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에는 경찰장구·무기·분사기·기타 장비 등이 있다.
- ②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하고,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 하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위해성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② 옳음. (동 규정 제12조 ②)
- ③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①)
- ④ 틀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⑤)

10. 경찰 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층제는 권한의 책임과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기술의 도입이 용이하다.
- ② 수사경찰이 내부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이중의 지시를 받는 현재의 제도는 통솔범위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③ 직무를 책임·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여 상하간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조직원리는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 ④ 갈등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계층제는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으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곤란하다.
- ② 틀림. 수사경찰이 내부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이중의 지시를 받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는 명령통일의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③ 틀림. 직무를 책임·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여 상하간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조직원리는 계층제의 원리이다.
- ④ 옳음.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직분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독일·프랑스·일본 등이 이 제도를 따르고 있음
-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속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 협조가 용이함
- 조직 외부로부터 충원이 힘든 폐쇄형 충원방식을 취함
-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함

- ① 계급제 ② 엽관주의 ③ 실적주의 ④ 직위분류제

[정답] ①

[해설]

계급제에 대한 설명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 ② 틀림. (동법 제11조③, 제21조 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1조)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21조)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일 이내</u> 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옳음. (동법 제19조①, 제20조 ①)
- ④ 옳음. (동법 제18조③)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3.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 ②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③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경범죄처벌법」상의 교사·방조는 형법총칙상의 교사·방조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경범죄의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 x)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경범죄처벌법 제5조)
- ② 옳음. (동법 제6조 ②)
- ③ 틀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②)
- ④ 틀림.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동법 제4조)

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할 때,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검사는 직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5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긴급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② 옳음. (동법 제8조의2 ②③)
- ③ 틀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③)
- ④ 옳음.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의2 ①)

15.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설명 중 그 입장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정보력을 가진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경찰국가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중복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③ 현재의 제도는 검사가 공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공소제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공소제기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반대론의 입장.
- ②③④ 경찰 수사권 독립 찬성론의 입장

■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반론(정진천 실무종합:p.178)

찬성론	①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변사자 검시의 경우 발생단계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사체 인도의 지연 등으로 유족에게 불편을 주는 예가 있다. ③ 소수의 검사가 공소권 및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의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 ④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⑤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⑦ 현재의 제도는 검사가 공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론	①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1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병호 비상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②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를, 경계 강화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작전준비태세 시에는 별도 경력동원은 필요하지 않고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응소체제를 유지하면 된다.
- ④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경비비상 을호를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옳음.

▣ 경찰 비상업무 규칙(정진천 실무종합:p.252)

근무요령 (제7조)	갑호 비상	연가를 중지 / 가용경력 100%	지휘관·참모는 정작 근무를 원칙	
	을호 비상	연가를 중지 / 가용경력 50%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	
	병호 비상	연가를 억제 / 가용경력 30%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	
	경계 강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경찰작전부대	출동대기태세 유지
			지휘관·참모	지휘선상 위치 근무 원칙.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시 적용)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 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 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 시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 ④ 틀림.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경비비상 **병호**를 발령하는 것이 적절하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③)[별표1]

▣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정진천 실무종합:p.251)

경비비상	갑호	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가용경력을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호	1.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2.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호	1.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예견되는 경우 2.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3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작전비상	갑호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을호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일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경우
	병호	정·첩보에 의해 적 침투에 대비한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비상	갑호	간첩 또는 정보사범 색출을 위한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 필요시
	을호	상기 상황하에서 특정지역·요지에 대한 검문검색 필요시
수사비상	갑호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을호	중요범죄 사건발생시
교통비상	갑호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발생시
	을호	상기 징후가 예상될 시
경계강화	기능 공통	"병호"비상보다는 낮은 단계로,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시 적용	"경계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었고,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② 무면허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③ 앞지르기가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도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 ④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단순히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도2939)

- ② 옳음. (대법원 86도2731)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22조 ③_)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2조)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

④ 옳음. (대법원 2007도2919)

18. 정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략정보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보이고, 전술정보는 전략정보의 기본 방침 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로서,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된다.
- ② 정보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극정보와 소극정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적극정보는 국가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정책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하고, 소극정보는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말한다.
- ③ 공개출처정보는 정보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뜻하며, 방대한 양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 ④ 정보의 적시성(timeliness)이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은 생산자의 생산 시점이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정보의 적시성(timeliness)이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용자의 사용 시점이다.(정진천 실무종합p.302)

①②③ 옳음.

1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②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 발생하면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청구하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 ④ 「보안관찰법」에서 정한 집행중지의 요건이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를 말한다.

【경찰학개론】 19'경력경쟁채용

NAVER cafe : 빛속도 경찰학

해설 : 빛속도 경찰학 정진천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보안관찰법 제5조①②)
- ② 옳음. (동법 제12조①②⑩)
- ③ 틀림. (동법 시행령제23조①③)(정진천 실무종합:p.336)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제23조) 시행령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주거지 리·통·반의 장의 확인서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또는 소재불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 관할 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를 하고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④ 옳음. (보안관찰법 제17조③)

20.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 중 다음 설명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하며, 사회적으로도 다언어 방송·문서·교육을 추진하고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해 지원하기도 한다

- ① 동화주의 ② 다원주의 ③ 급진적 다문화주의 ④ 촉진주의

[정답] ②

[해설]

▣ 다문화사회의 접근 유형(정진천 실무종합:p.344)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① 자유주의적 접근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간의 차별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나, 다문화주의를 정치적 자결권부여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을 접근한다. ②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②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법적 원조를 한다. 예 다언어방송, 다언어 의사소통, 다언어 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사적 영역에서 소수민족 학교나 공공단체에 대해 지원하기도 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	①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다문화주의는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한다. ②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③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으로, 예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 아프리카의 소부족 독립운동 등